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6. 30.

발 의 자 : 조승래 · 김상희 · 김승수
김철민 · 유정주 · 이규민
이병훈 · 이상현 · 이원욱
임오경 · 조응천 · 최인호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유물·유구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(人骨)과 미라(mummy) 등의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로 인해 출토되는 인골·미라 등은 그 자체로 보존해야 할 문화재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,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무연고 시신에 해당하여 화장되는 등 그 보존에 어려움이 있음.

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·미라 등은 옛사람들의 유전적·형질적 특성과 식생활문화, 사망 원인 등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질병 지도나 수백 년 전 생활 습관, 과거의 문화 및 역사 등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에 대한 입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출토되는 인골·미라 등의 처리에 필

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인골·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·보관 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2 신설 등).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)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

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(人骨), 미라(mummy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·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그 현상(現狀)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출토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료가 연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(이하 이 조에서 “중요출토자료”라 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. 다만, 인골, 미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.

1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(이하 “연고자”라 한다)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

2.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

③ 문화재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인골, 미라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보관 조치를 하려는 경우

에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인골, 미라를 매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요출토자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요출토자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 위하여 전문기관(이하 “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⑥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 및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⑦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·운영 및 그 밖에 중요출토자료의 연구·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 중 “현상(現狀)을”을 “현상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발견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,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·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4조의2(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)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(人骨), 미라(mummy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·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그 현상(現狀)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출토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료가 연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(이하 이 조에서 “중요출토자료”라 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. 다만, 인골, 미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(이</u></p>

하 “연고자”라 한다)가 없거

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

2.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

③ 문화재청장이 제2항 단서에
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
를 알 수 없는 인골, 미라에 대
하여 연구하거나 보관 조치를
하려는 경우에는 「장사 등에
관한 법률」 제12조에도 불구
하고 인골, 미라를 매장 또는
봉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
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
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
중요출토자료위원회를 설치할
수 있다. 이 경우 중요출토자료
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정한다.

⑤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
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
위하여 전문기관(이하 “중요출
토자료 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을
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⑥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
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 및 보

	<u>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⑦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·운영 및 그 밖에 중요출토자료의 연구·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제16조(매장문화재 현상변경)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(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)의 <u>현상(現狀)을</u>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, 제12조, 제12조의2,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16조(매장문화재 현상변경) --- ----- ----- <u>현상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